

한국 사회의 메리트크라시(Meritocracy) 특성 비판

신혜진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는 말
- II. ‘메리트크라시(meritocracy)’의 이중적 의미
- III. 한국사회에서의 메리트크라시 특성
 - 1. 세습과 자본주의의 문제
 - 2. 명분과 민주주의의 문제
 - 3. 파워엘리트의 결탁과 역할-책임의 문제
 - 4. 신자유주의 메리트크라시와 한국 여성
-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2.53.02>

• ABSTRACT •

Criticism on Meritocracy in Korean Society

Lecturer, Shin, HyeJin (Ewha Womans University)

Meritocracy professes an equal society that respects individual merit. However, Meritocracy has contributed to the mechanism to justify the social hierarchy of classes. Sociologists concerned about the polarization of class structure in capitalism criticize that Meritocracy has promoted social inequality with conflict and division in society. This article discloses that Meritocracy consists of contemporary aristocratic inheritance, justification of democracy, and collusion with Elitism. This research presents how the term 'Meritocracy' is used in various contexts of Korean society. It also shows how 'Merit competency-hierarchy' and Neoliberalism have separated Korean middle-class women. This study offers the position and perspectives in political-economical-social geomorphology of Korean Society to access and interpret the phenomena through democratic Ideas and ethical-theological thoughts.

Key words: Meritocracy, Merit Competency-Hierarchy, Neoliberalism, Social Inequality, Woman

I. 들어가는 말

능력주의는 무엇일까? 메리토크라시는 또 무엇일까? “오직 능력만을 선발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을 때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인가?

고대 사회에서 덕(aretē)이란 폴리스 국가를 다스릴 지도자가 가져야 할 탁월성(merit)이자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을 말하는 것이었다.¹⁾ 현대 사회에서도 탁월성(merit)이란 사회적 성취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해진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이라는 것은 소비나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나 덕목처럼 취급되고 있다. 시대의 고금을 막론하고 ‘능력’이란 사회 유지와 사회적 성취를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이라고 인식되어왔다. 다만, 현대 사회에서 ‘능력(merit)’이란 인간의 자질이나 성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인정과 같은 보상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능력’이란 사회 안에서 인간 개인의 인정과 지위를 포함하여 재화, 자본, 특혜, 점유와 연계되어 있으며, ‘능력주의’는 이 관계를 사회적 공정성 하에서 약속된 상태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능력주의’라는 말 안에는 혈연, 출신, 지역, 배경들이 배제된 사회적 공평성과 정의(正義)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능력주의’에 대한 담론으로 등장한 ‘메리토크라시’가 주목받고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가? 메리토크라시를 옹호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첫째로, 능력주의는 인류 역사상 근대 이후 사회 불평등과 불합리성을 최소화하고 평등, 공정, 정의로운 사회를 발전

1) 아레테(aretē)는 ‘덕’ 또는 ‘탁월성’으로 번역되나, 사실상 고대 그리스적 사고에서 덕이 의미하는 바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그 역할을 잘해내는 것, 맡겨진 자리나 일을 잘해내는 것, 존재하는 목적에 합당한 기능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박종현, 『플라톤: 메논, 파이돈, 국가』 (서울: 서울대출판부, 1987), 190-191, 220-224, 350.

시켜 왔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사회적 발전을 이루어온 주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능력자들이었으며 따라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회적 보상과 특혜를 점유할 마땅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²⁾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메리토크라시’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회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라는 담론은 인류의 근현대사에서 통용되어왔던 능력주의 개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목적은 사회적 평등과 정의 또는 사회적 공정성과는 전혀 상관없으며, 이는 극소수 특권층의 사회적 점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담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메리토크라시는 통상적으로 ‘능력주의’로 해석되고 있으나, 실상은 특정 소수가 자신들의 특권 점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방어기제라는 것이다. 사회적 부와 특권을 이미 확보한 극소수 엘리트들은 사회 내에서 그들의 점유와 성취를 합리화하기 위해 ‘능력주의’를 전면에 앞세우며 중간계층의 붕괴를 당연시하고 불공평한 사회구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메리토크라시를 옹호하는 진영에서는 사회 내 소수 엘리트나 지도층으로서 그들의 부나 사회적 특혜가 그들의 성취에 합당한 보상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반해, 메리토크라시를 비판하는 진영에서는 ‘메리토크라시’의 숨은 주장을 보면 어떤 사회나 0.5%의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구조에 갇혀서 나올 수 없는 사태인데 그 안에서 사태의 원인이 능력 부족에 있으니 그것을 인정하라는 우회적 강요라는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Meritocracy(능력주의)’라는 용어의 이중

2) 예를 들어, 어떤 한 국가에서 최고통수권자가 행정부 내각을 구성하면서 공무원 임면권을 행사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겠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각 부 장관들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나는 임명 대상자의 타고난 출신, 지역, 성별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개인의 능력만을 보고 뽑을 것이다. 그래서 모두 S대학을 나온 실력자들을 뽑을 것이다’라고 말한다고 하자. 이 점은 메리토크라시적 특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능력’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적 의미와 모순적 사태를 ‘능력주의의 허구’ 또는 ‘능력주의의 덫(trap)’, ‘함정’이라고 지칭하고 이에 주목하고 있다.³⁾ 능력주의라는 용어를 접할 때, 사회 안의 구성원들은 모두 각각 ‘공정한 능력주의’ 속에서 자신을 ‘능력 있는 자’의 부류로 놓고 오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오해를 하도록 만드는 기제가, 또는 실행도구가 ‘Meritocracy(메리트크라시)’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마이클 샌들 역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능력주의(Meritocracy)’가 인간의 내면화 과정에 개입될 때 인간의 도덕 가치는 무력화되고 그 대신 시장 가치가 그것을 잠식하여 인간의 이성과 존엄성의 기반을 해친다고 역설해왔다.⁴⁾

하지만 이 문제가 다루어지는 구체적 장소가 학문적 논의의 장이 아닐 경우 능력주의 자체의 오류는 지적될 소지가 희박하다는 사실, 그 때문에 능력주의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리나 필요성조차 보편적 여론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토론이 시작된다 해도, 사회 내 매우 상이한 입장들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객관적인 균형점을 마련해야 하는 위치 설정의 난제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 논의 자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그 주제를 채택한다고 해도 그것이 위치한 범위가 여러 영역과 층위에 걸쳐있기 때문에 실제로 단일 영역의 연구 과제가 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최근 부각된 ‘메리트크라시’ 이론에 대하여 접근하되 사회윤리적 자리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능력주의’로 해석되는 메리트크라시(Meritocracy) 담론과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한

3) McNamee, Stephen J. and Meller, Robert K., *The meritocracy myth*, 김현정 역, 『능력주의는 허구다』 (서울: 사이, 2015), 23-24, 37-42; Markovits, Daniel, *Meritocracy Trap* (N.Y.: Penguin Books, 2020), 14-16.

4) Sandel, Michael J.,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함규진 역,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서울: 와이즈베리, 2020), 221-228, 308-313, 318-327, 348.

국 사회 현상을 놓고 볼 때, 그 내부를 탐구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현실 사태를 고찰할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기독교 정신이 인간 존엄성과 평등성을 지키고자 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는가 하는 보다 큰 문제의식 가운데, 기독교 신학은 어떤 자리에서 이 현상을 파악하여야 하며, 우리 사회 내의 공동체적 방향성은 어디서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가를 재차 물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여성’이라는 집단을 이 고찰의 대상으로 하여, 사회학과 신학 시각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또 다른 학문들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를 위한 논의 자리를 구성하려고 한다. 그 첫 단계로, 이 연구는 메리토크라시가 가진 여러 논쟁이 ‘Meritocracy’라는 용어 사용과 그 해석에서 생성된다고 보고 이를 분석한다. 그 다음 단계로는, 여기서 파악된 분석 내용을 실제로 한국사회 현상에 놓고 적용하여 그 실체와 특징을 확인할 것이다.

II.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의 이중적 의미

그렇다면, ‘메리토크라시’라는 담론과 그것이 말해진 사건으로서의 발화 행위는 그 목적과 주체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 언어의 쓰임과 작용에 대하여 먼저 보아야 할 것이다.

메리토크라시의 담론적 특징은 그 용어의 의미와 형태를 분석해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이때 담론의 핵심은 ‘Merit’가 아니라 ‘Cracy’, 즉 ‘Crato’에 있다. 문제의 핵심이 ‘Cracy’에 있다는 말은, 메리토크라시라는 담론이 가진 문제가 국가와 사회 전체 체제를 이끌어가는 주체와 방식, 그 방향성에서 중요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내포한다. 이제껏 능력주의 사회(Meritocracy)는 합성된 두 단어 중 앞에 있는 ‘능력(Merit)’에 중점을 두어 말해왔지만, 실제로 그 실상과 문제의 본질은 뒤에 있는 단어, 곧 ‘Cracy’나 ‘Crato(지배-체제)’에 있어서 ‘사회를 능력으로 계급화’하는 방향

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그러한 사회적 방향성은 세계 각국에서 계층 양극화가 진행되어왔던 사회상을 통해 이미 노출되어왔으나 최근 부각된 메리트크라시에 의해 그 모순점이 더 날카롭게 간파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교육학에서의 자각, 즉 현실 교육과 사회에 대한 비판에서도 매우 잘 드러난다. 이때 ‘교육’은 더 이상 인간교육의 사회화를 뜻하기보다 기존 사회의 위계질서를 교육화 하는 장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지적된다. 지식사회학이나 교육사회학에서는 현재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를 주도하는 기능을 담당하지 않고 이와는 달리 기존 사회를 존속시키는 기능으로 작동된다고 말한다.⁵⁾ 여기서 그 기능이란 계급의 영속화 또는 사회 내 계급의 소유화를 의미한다. 이는 근대 이전에 시민계급 생성 이전까지만 가능했던 사회적 부와 직위의 세습이 현대에 와서 ‘능력’이라는 합리적 기재로 변환되어 특정 계층의 사유화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다.⁶⁾ 다시 말하면, 인간 개인의 존엄성과 평등의 공동체를 위한 사회화 교육이 아니라, 경제적 자본과 생산성에 포획된 능력이 그것을 위시한 권력과 소유체제의 주입을 위해 구축하는 교육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한국 사회에서도 당연하게 여겨져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신학적 시각은 좀 다르다. 이러한 사회 현상과 권력 구조에 의한 체제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것이며 불완전한 것이므로, 보다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현실 세계를 다르게 인식할 가치 체계와 그 행위에 대한 기준 근거가 분명하게 있다고 말한다. 이 논문은 연구방법론으로서 이러한 신학적 시각이 현재 사회

5) 김신일,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1997), 219-254.

6) Hughes, Conrad, *Education and Elitism: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NY: Routledge, 2021), 19-22. 여기서 저자는 사회역사적이고 철학적 시각에서 엘리트주의를 주장해왔던 관점들을 짚어보면서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에 있는 능력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수직적, 위계적, 성취한 소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연구에도 필요하며 그것이 이 사회의 대안적 시점으로 요구된다고 본다. ‘신의 시각’을 의식함으로써, 인간의 능력과 소유, 자유 전반에 걸쳐 이 모든 주체들의 관계를 보다 넓고 긴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와 개인 문제 중 어떤 한 부분에 매몰되지 않고 주요한 이념들의 관계를 구분하고 재설정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 입각하여 본다면, 종교개혁 이후 인간 개개인은 ‘영적 제사장’이자 독립된 사고체계를 가진 ‘고유한 존재’이며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전제를 재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 그 관계에 대해 존엄성과 평등성을 동시에 지닌다는 사실과 가치 기준으로부터 말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자유, 그것을 위한 소유권 문제, 이와 더불어 사회라는 공동체를 의미 있게 형성하는 일, 그 모두를 중요한 것으로 놓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 시각은 근대 이후 민주주의의 정치 체제로서 인간 존엄성과 평등성의 이념을 현실화해 왔던 인간 주체성을 전제하고, 전제하고, 사회와 역사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인류 역사에서 노예제가 철폐되어 자유롭게 되고 민주주의로서 모든 사람의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이 비로소 왔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역사적 현장을 보면 과연 ‘발전’하여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떠오른다. 즉 직선적인 기독교적 역사발전 시각에서 말할 때, 지금 사회는 평등하며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나와 우리는 그 존엄성 그대로 취급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부상된다는 것이다. 한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 복음을 통해 세계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가고 있다는 기독교적 시각이 세계를 낙관적으로 보게 하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도 그 시각과 의지와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한가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사회과학에서도 거시적인 시야를 확

보하고 성찰적인 사회과학에 대한 이론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이고 문화적 시각은 사회적 현상을 보는 다수 관찰자의 시야를 확대시켜 주며, 종교적 시각이나 철학적 시각은 인간과 사회의 상호관계를 논증하며 그것에 대한 통찰을 제시해준다. 따라서 사회 현실과 현상에 대한 관찰이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학문적이고 객관적 관찰을 위해 사회 전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사회학적 시각을 도입하여 현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문제점을 조명하고 들여다본다면 그 핵심으로의 접근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⁷⁾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사회성찰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지금 여기서 한국사회는 어떤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의 본격적 작업은 현실 사회에 대한 사태 파악 즉 현상보기 작업에 있어서 한국 사회 탐구를 위한 모집단으로서 한국 사회의 ‘여성’을 통해 그 상황들을 분석하려고 시도한다. 한국사회에서 모집단으로서 ‘여성’은 한 집단으로서나 한 계층으로 치환될 수 없으며 그 입장도 각각 다르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통칭되어 논의되지만 실제로 ‘여성’이라는 사회적 모집단을 본다면 그 안에 각각 다른 계급이 분포하고 있어서 일부만을 취해서 일반화할 수 없다. 한 사회 내에서 ‘여성’을 지칭할 때 어떤 상황의 여성을 말하고 있는지 그 범위를 범주를 밝혀야 하며, 부분 ‘여성’을 가지고 와서 한국 사회 내 전체 ‘여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다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사회 방향성을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입장에

7) Giddens, Anthony, *Capitalism and modern social theory: an analogy of the writings of Marx, Durkheim and Max Weber*, 박노영, 임영일 역. 『자본주의와 현대사회이론: 마르크스, 뒤르켐 그리고 막스 베버의 저작분석』 (파주: 한길사, 2008), 349-380. 일찍이 역사상 사회철학적 시각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이러한 사회문제를 미리 짚어보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고, 뒤르켐이나 베버와 같은 학자들 역시 사회변동 시기의 사회불평등 문제와 사회통합문제에 대해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서 당시 사회와 종교와의 관계를 이론화한 바 있다.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서 보아야 할 것을 조건으로 가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성’ 현실에 대한 통찰은 과연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전체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 주체로서의 여성, 인간 전체, 공동체에 대한 보다 너른 시각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또한 개개인들이 사회와 더불어 그 존엄성과 평등성을 논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인지, 그 논의 지형 및 접경 지역을 찾아볼 것이다.

한 사회에서 인간 개인이 사회조직체와 연결되는 방식은 일(노동)과 보상(인정과 배분)을 서로 맞교환하는 제공 방식이 있다. 물물교환 시대 이후 ‘거래와 계약은 더 명확해져왔고 근대이후 ‘ 댓가와 보상’의 문제는 보다 합리적으로 계산되어왔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러한 계산법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것은 개인의 일과 사회적 보상의 문제에 관한 등가 공식에 중요한 변수가 있고 그것이 눈에 두드러지게 다른 결과를 산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의한다. 그 변수는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에서 주장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능력주의’와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는 의미상 동일하게 들리지만 사실상 그 용어가 쓰이는 맥락과 그 사용 주체들은 전혀 다르다. 현재 ‘메리토크라시’는 근대 이후 생성되었던 ‘능력주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사실상 발화/언술 과정에서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만 한다. 이 논문의 연구는 현대 사회 안에서 논쟁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메리토크라시’를 놓고 사회학적 시각들로 접근할 때 그 이론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의미, 특히 그 용어 사용에 내재한 모순점을 밝혀내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이후 이제까지의 능력주의와 최근 나타난 ‘Meritocracy’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과연 그 두 가지 ‘능력주의’가 지향하는 사회들 간에 차이는 있는가?

먼저 여기에 두 가지 ‘능력주의’가 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능력주의가 표방하는 사회가 있다. 그중 하나는, 근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능력주의’이다. 근대라는 시기는 인간으로 하여금 혈연적 관계로부터 체계적 전체 사회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 개인으로서 인간은 집단적 사회 안에서 ‘일’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고 그 역할에 따른 보상을 통해 개인적 생활과 사회적 생활을 동시에 영위하는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근대라는 시기는 사회적 구조가 완전히 변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개인은 ‘능력’을 존중받아 혈연, 지연, 지역, 계층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 사회는 사회 구성원의 일과 역할 수행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였는데, 이것은 역사상 사회 안의 보편적인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따라서 ‘능력주의’란 개인의 주체성과 평등성이 확립된 근대 이후 ‘능력이 존중되는 사회’를 지시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인간이 사회적 권력을 소유하게 되는 방식과 그 방식의 공정성까지 일컫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등장한 ‘메리트크라시(Meritocracy)’는 이와는 전혀 다른 ‘능력주의’이다. 메리트크라시가 표방하는 사회란, 사회 구조를 능력의 차이로 정당화 하는 위계주의 사회이다. 그 기준이 되는 ‘능력’의 공정성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 의미가 앞의 ‘능력주의’와는 전혀 다르다. 그 공정성이란 기회의 공정성이 간과된 성취 결과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상이한 발화주체의 의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이 용어들이 다르게 지칭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여러 저서와 출판물에서 번역되어 등장하는 ‘메리트크라시’를 이전의 ‘능력주의’와 구분하여 ‘능력 위계주의’라고 설명할 것이다. 특히 이 논문은 ‘메리트크라시’가 의미하는 바를 기표(시니피앙, signifiant)와 기의(시니피에, signifie)로 구분하여 분석하면서, 근대 이후부터 있었던 ‘능력주의’

가 뜻하는 바를 기표(記標)로, 그리고 최근의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가 뜻하려는 바를 기의(記意)로 구분하여 설명할 것이다.⁸⁾ 그 의미를 구분하고 언어 사용주체의 상이성을 드러내어, 두 능력주의에서 그 사회적 주체는 각각 누구이고 사회적 방향성은 무엇을 향하고 있으며 그 ‘능력’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논거를 제시할 것이다. 그것으로써, 그 신학적 해답과 사회적 적용을 모색할 때 그 작업을 위한 논의 지형을 확보하고자 한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메리토크라시’를 번역할 때 ‘능력주의’가 아닌 ‘능력 위계주의’로 옮겨 써야 할 것을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근 수십 년 간 현대사회 문제와 더불어 등장한 메리토크라시는 일단 능력주의에 관한 여러 의미층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능력주의가 가져왔던 의미의 퇴적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그 용어를 쓰고자 하는 목적에 맞추어 ‘기표’로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수긍해온 사회 진출방식과 권력획득 방식에 사용되었던 ‘능력주의’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현재 권력중심의 위계화 된 구조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만든 언어적 표현(기표, 표기적 언어)이라는 점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메리토크라시는 능력 위계주의 사회를 표방하므로 내용상 기존의 엘리트주의와 유사하지만, 형식상으로는 이미 평등적 사회구조적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게끔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능력주의를 주창하는 발화주체가 이미 특정한 계급의 체계화를 위해 의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숨기고 듣는 사회 다수로 하여금 오인하도록 하는 언어의 이중적 의미 사용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능력주의’가 발화될 때 수용되는 의미는 의도하는 의미와 대치국면에 놓인다. 메리토크라시는 권력을 이

8) 언어학자 소쉬르는 언어를 소리와 뜻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Meritocracy’의 의미를 고찰하면서, 그 언어가 표시하는 바(기표)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기의)를 분리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미 획득한 특권계층의 정당화 기재 또는 정당화하기 위한 담론으로서 기존의 능력주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의 ‘능력주의’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놓고 ‘공정한 선발’ 또는 ‘기회의 공평성’을 전제로 하며 민주주의 사회 내 일종의 약속과 같은 신뢰 관계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 외에도 특정 사회적 위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 특혜 또는 자본의 소유를 위한 상황을 가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능력’이라는 것이 다른 여타 조건들로서 외모, 혈연, 지역, 인척 등과 같은 불공평한 요소들을 상대화시키는 중요한 선별 원칙이면서 조건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점에 근거한다. 또한 그것은 전체 사회가 각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사회적 신뢰 기반이자 상식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인식 지점에 위치하여 왔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다.⁹⁾

그러나 이와는 달리, ‘메리토크라시’가 말하는 바와 말 하고자 하는 바 사이에는 유격이 있다. 즉 기표와 기의를 조금 더 자세히 구별하여 논리를 살펴보면, 발화자의 의도와 맥락에서 전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판별이 가능하다.

논리의 우선순위에서 ‘무엇이 먼저인지’에 대한 예증이 필요하면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그것은 “p이면 q이다”와 “q이면 p이다”의 차이를 판별하는 일이다. p는 ‘능력 있다’이고 q는 ‘소유/점유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기존의 능력주의는 ‘능력 있다 → 소유/점유한다’의 명제를 따른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메리토크라시의 ‘특권층은 q이면 p이다’ 즉 ‘소유/점유한다 → 능력 있다’로 발화자의 맥락임이 밝혀진다. 메리토크라시는 기존

9)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의 관념을 전제로 하여 발화 내용을 전달하지만 실제로 그 상황적 맥락은 p와 q, 즉 ‘점유’와 ‘능력’이 도치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평등’에서 말해졌던 인간의 ‘점유(소유)’와 ‘능력’이 역의 관계를 성립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능력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능력주의가 기회공정성을 확증해야 한다는 기존의 기회공평성에 대해 강조하며 최근에 대두된 메리토크라시에서 발화자와 그의도에 대해 주목하여 왔다. 이 논문에서는 ‘능력주의’를 통해 되어지는 말과 하려는 말 사이에 차이를 구분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p와 q의 관계 즉 ‘능력’과 ‘점유/소유’에 대한 관계 방식에 대해 분석한다. 따라서 근대 이후 선택의 평등성을 중시하는 능력주의로서 ‘p이면 q이다’가 아닌, 그 역으로서의 ‘능력 위계주의’ 즉 ‘q이면 p이다’가 성립하려면 그것을 만족시키는 조건들이 별도로 필요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그 역을 성립하게 하는 조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III. 한국사회에서의 메리토크라시 특성

1. 세습과 자본주의의 문제

앞에서 사회학적 비판을 통해 본 ‘메리토크라시’는 인류의 근대사에서 성취했던 ‘능력주의’라는 개인-사회의 연결방식을 차용하여 기존에 획득된 특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재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프로파간다라는 점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낳은 사회 구조 즉 이미 중산층이 와해된 사회적 계층 구조에 대한 묘사이며, 그 현상을 발화자 중심으로 사용한 특성이라는 점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메리토크라시’의 내적 특성은 여기서 더 들어간다. 능력주의라는 현대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이용하되 그 본질은 귀족제의 내용을 확보하고 있는 정치 체제를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⁰⁾ 메리토크라시의 능력 위계주의적 특징은 귀족주의와의 비교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여기서 오늘날의 능력 위계주의(Meritocracy)가 귀족주의(Aristocracy)와 비교되는 점은 ‘귀족’이라는 특권 계급의 ‘세습’과 유사한 현상을 가진다는 점이다. 근대 이전까지 사회에서는 귀족과 같은 특정 계급이 전체 사회를 움직이는 권력 주체였다. 귀족 계급(Aristocrate)이나 귀족주의(Aristocratism)는 ‘귀족’에 의해 운용되는 사회를 지칭하며 그들이 사회의 주축이 되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회 전체를 움직이던 체도를 말한다. 귀족주의 사회에서는 사회 안에서 정치뿐 아니라 경제적 부, 문화적 지위와 특권이 귀족에게 귀속되는 것을 당연시했으므로, 귀족은 그 특권을 독점적 형태로 세습할 수 있었고, 이에 더하여 사회 내 자본과 재화를 점유하거나 배분하는 방식을 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특정 소수가 사회 대다수의 부를 획득하고 그것을 독점하는 일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사회 전체의 부에 대해, 또한 국가 전체의 부가 나뉘지는 분배 방식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없었던 때는 오로지 근대 이전이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한 민주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구성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함으로써 자본가와 노동자의 생존을 동시에 감안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수정 보완해간다는 것이고 그렇게 모든 계층의 인간이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가도록 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며 계약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암묵적 동의이자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사회복지제도가 담당할 역할이기도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초기부터 ‘사회에서 최상층인 1명이 존재하려면 최하층 500명이 생기는 구조가 자본주의라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개선, 수정, 보완이 요구됨을 수용하여 시작했던 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발단이었기

10) Markovits, Daniel, *Meritocracy Trap*, 8, 13-15, 16-19.

때문이다.¹¹⁾ 따라서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는 지난 200년이 넘는 동안 사회 내 수많은 수정 과정을 거친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에서 실행되는 자본주의란 이러한 과정을 거친 자본주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자본주의의 불공정성과 불평등성을 하나같이 폭로하고 있다.¹²⁾ 왜 그러한가? 그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자신의 능력으로 부를 소유하고 축적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졌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동시에 세계 도처에서 그러한 자격이나 능력과 소득의 문제가 합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들이 부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개인의 자격 또는 능력이 공공의 계약이나 약속과는 상관없는 ‘세습’으로 사회적 자본과 재화를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노출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적 부를 독점한다는 것이 결국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시되었던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
- 11) ‘큰 재물에는 반드시 큰 불평등이 따른다. 큰 부자 한 명이 있으려면, 적어도 500명의 가난뱅이가 필요하다.’는 애덤 스미스의 말을 인용하여 최상층과 최하층은 똑같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 또는 사회 상태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Bauman, Zygmunt, *Does the richness of the few benefit us all?*, 안규남 역,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과주: 동녘, 2013), 9-11.
- 12) Bourdieu, Pierre and Passeron, Jean-Claude, *La reproduction: éléments pour une théorie du système d'enseignement*, 이상호 역, 『재생산』 (서울: 동문선, 2003), 24-29. 교육사회학 등 교육과 계급의 관계를 사회학의 비판적 시각에서 보는 입장은 ‘문화자본을 분배하는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본다. 즉 계급들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관계의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이 교육이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재강화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지적이다; ‘자본가 계급의 권력과 권위는 세습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평등주의적인 학교개혁의 실패는 자본주의하의 불평등이 개인적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객관적인 업적에 기초하여 개개인을 경제적 지위에 분배하는 것을 정당화함으로써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입장이다; Bowles, Samuel and Gintis, Herbert,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이규환 역, 『자본주의와 학교교육』 (서울: 세계질, 1986), 125-153; 교육의 내용은 항상 ‘공식적 지식에 대한 통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항상 정치적 과정이라는 점을 저자는 미국적 상황으로 예증한다; Apple, Michael W., *Official Knowledge: democratic education in a conservative age*, 박부권 역, 『학교지식의 정치학』 (서울: 우리교육, 2001), 144-149, 182-183.

근대 이후의 사회 극소수가 사회 전체의 재화나 특권을 임의로 할당하는 방식, 즉 ‘능력에 의해서’라고 정당화 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사회 공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사회 안에서 경제적 부의 분배 문제는 개인에게는 일과 소득의 문제로 중요하나 동시에 사회로서는 전체 사회적 방향성이 현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위기의식이 심화된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두드러지는 메리토크라시의 문제는 귀족주의와도 같이 사회 극소수가 전체 부의 상당량을 독점하고 그것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그 사회적 신분을 귀족의 세습처럼 독점하면서도 그것이 ‘능력에 의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있다.¹⁴⁾ 메리토크라시의 특성은 오늘날 극소수가 공평한 기회를 사실상 무효화하고 그 세습적 특권으로 사회적 지위를 점유하며 신자유주의 체제의 특권을 독점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특권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글로벌한 자본주의 사회구조와 신자유주의 체제 내에서 이익 회수가 가능하고 기술통제가 가능한 극소수로 제한된다. 때때로 무한경쟁 구조에서 대체가능한 인력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이는 현상 유지를 위해 가동되는 ‘능력’이면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 특권을 점유할 수 있다고 여기게 하는 ‘능력’이므로, 동상이몽과도 같은 능력이다.

13) 유팔무, 김원동, 박경숙,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서울: 삼화, 2005), 30-45, 153-175.

14) Young, Michael, *The rise of the meritocracy*, 유강은 역, 『능력주의: 2034년,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엘리트 계급의 세습 이야기』 (서울: 이매진, 2020), 83, 172; 신중섭,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서울: 자유기업센터, 1999), 216-218.

2. 명분과 민주주의의 문제

이 절에서 살펴볼 것은,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와 민주주의(Democracy)의 관계이다. 여기 두 단어 모두에서 '-cracy'라는 접미어를 주의해 볼 수 있다. 이 단어는 합성어로서 'cracy'(crato, 지배, 정부, 정치 체제)라는 동일한 접미어를 가지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누가 이 사회의 주체인가에 대한 물음과 함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려고 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사회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와 체제도 중요하지만, 그 방식을 채택할 경우 전체 사회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것이 메리토크라시가 사회분배 이론에서 그치지 않고 정치 이론에서 거론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민주주의(Democracy)와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 보도록 하자. 민주주의는 민(民)이라 하는 사람들 즉 국민, 민중, 인민, 시민으로 지칭되는 다수 주체(demo)의 주권 행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가장 우선 될 것이다. 즉 메리토크라시라는 공적인 담론 발의와 발화 작업과 연이은 작동이 민주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 용인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사회 운영 방식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바의 가치대로 갈 수 있는가를 물으며 합의하는 공공의 약속이 중요시된다. 그러나 주체 물음이 제외될 때, 그 운영방식에서 메리토크라시의 주체가 전체 다수에 대하여 제안하는 형식으로 경쟁관계에서 승자의 독식을 다수의 동의로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메리토크라시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위해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선택된 것이 되며, 경제체제인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적 독식체제 안에서 인간의 자유 실현을 위해 선택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한 자유의 토대에서 인간 개개인의 소유권과 다른 권리들의 독점을 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민주주의-자본주의는 공

존하는 형태로 유지되어 왔으며, 그 우선되는 기본적 가치로서 민주주의(Democracy)의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은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가치로 여겨져 왔지만,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의 그 어떤 것에도 오류로 판명되지 않고 전제된 사실의 용도 변경만으로 정당화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 내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보상을 연결하는 ‘능력주의’라는 논리적 형식은 표면적으로만 효용성을 가지게 된다. ‘민주주의-자본주의’의 공존은 ‘민주주의-능력 위계주의’로 악화된다.

법적인 차원에서는 외면적으로 ‘Meritocracy’가 민주주의(Democracy)와 서로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능력 위계주의가 가지는 속뜻 즉 언어적 기의(기의) 면에서 본다면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과 승자독식 구조는 그 실행 과정과 결과와 정치적 지향 면에서 모두 민주주의적 평등 가치와 모순된다. 능력 위계주의 사회는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무한경쟁 구조 속에서 그 능력치를 위계화 하고 계급화 하는 사회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능력 위계주의 사회를 건립한다는 것과, 단순히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기회공정성을 뜻하는 능력주의가 실행된다는 것은 의미상 전혀 다른 것임을 식별해야 한다. 만약 구분되지 못할 경우, 이제까지 능력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 하거나 자신의 생업, 직업과 일,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능력주의’가 가지는 이중적 의미 안에서 갇히게 된다. 또한 능력 위계주의가 인간을 억압하는 상황이어도 이에 반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는 일차적으로 근대 이후 민주주의 사회를 일궈온 일반적 의미의 능력 존중주의 사회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능력 위계주의 사회로 가려는 그 정치적 함의가 표면에 노출되어서 그 정향과 방향성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확장되거나 확충의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능력 위계주의 사회(Meritocracy) 즉 능력이 위계로서 정당화되어 굳어지는 체제는, 대한민국 헌장에서 공표하는 민주주의 공화국 안에서 개인의 주권과 능력을 ‘국민 누구나(demo)’ 성취할 수 있다는 내용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에서 그 ‘능력대로’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그 법적 이념에 비추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대조해볼 일이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능력 위계주의는 민주주의 이념과는 상반되지만 오히려 그 ‘민주주의’ 안에서 법적인 제재나 행정명령이나 법규에 어긋남이 없다. 법 실행은 각 단위나 수위에 준하여 조정되므로 메리트크라시와 같은 담론은 법에 저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권을 점유한 극소수나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체제 유지의 조건들 역시 법에 저촉됨이 없도록 법을 조정하고 개정하는 일에 분주하다. 실제로 법에는 여러 수위가 있다. 법에는 강제력이 따른다. 하지만 법의 이념에는 강제력이 따르지 않는다. 이 사이에서 민주주의라는 대의명분이나 법의 이념에 따라 법을 구축하고 그 법을 집행하고 그 법을 수정하거나 조정하는 이들을 우리는 엘리트라고 부른다. 이들은 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맹점을 보여준다.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소수 대표에게 그 권위와 권력을 주어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대표직을 수행하도록 하지만, 반대로 그 합의에 의한 선출로도 민주주의의 이념과 목표는 실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대표성을 가진 정치 엘리트라는 소수 집단은 그 대표성을 자신의 능력에 대한 권리로 간주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3. 파워엘리트의 결탁과 역할-책임의 문제

대의민주주의에서 ‘엘리트’란 전체 사회 방향성에 대한 인식과 조정 제어능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엘리트’는 일반 대중보

다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을 거쳐서 정치제도나 경제 제도에서 공익을 위한 최선의 메커니즘을 형성하며 그것을 제공하도록 권력과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최상 1%는 세계 자산의 40%를 소유하고, 상위 10%는 전 세계 부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 50%는 전체 1%의 부를 나눠가지고 있다”고 말해진다.¹⁵⁾ ‘파워엘리트’ 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 집단은 더 이상 사회 전체와 공익을 위해 일하지 않으며 정의로운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공정한 경쟁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⁶⁾ 이에 더하여, 미국의 사회학자였던 밀스는 당시 사회계층의 구조에서 ‘신중간층’으로 불리는 대중이 자유라는 것을 소비의 자유로 착각하고 있으며 도덕이나 공적 사고를 하지 못한다고 그들의 무능까지 비판하였다.¹⁷⁾ 이렇게 볼 때 권력엘리트 사회는 단순히 능력 있는 극소수가 사회 권력을 차지하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구조 자체의 방향성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한국사회가 직면해야 할 문제는 기술과 자본의 축적이 무기 산업과 전쟁의 방향으로 집중되고 가속화되어가고 있다는 방향성에 대한 인식 문제이다.¹⁸⁾

이를 미국사회의 경우에서 보기로 하자. ‘파워엘리트’라고 불리는 이들

15) Putnam, Robert D., *Our kids: the American dream in crisis*, 정태식 역, 『우리 아이들: 빈부격차는 어떻게 미래 세대를 파괴하는가?』 (서울: 페이퍼로드, 2016), 11, 68, 70; 강원택 외,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파주: 21세기북스, 2014); Bauman, Zygmunt, *Does the richness of the few benefit us all?*, 안규남 역,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파주: 동녘, 2013), 9-11.

16) Davis, K. and Moore, W., *Class, Status and Power* (N.Y.: Free, 1966), 47-48.

17) Mills, Wright C. (*The power elite*, 정명진 역, 『파워 엘리트』 (서울: 부글북스, 2013), 405-444.

18) 한국 사회는 분단국가로서 자주국방능력을 확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무기산업을 확대하여 경제-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여왔다. 기술과 무기산업의 현황 중 단면은 다음에서 참고할 수 있다. 김상배, 『비대면 시대의 미중 기술경쟁: 정보세계정치학의 시각』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23-45, 51-55, 344-350; 서울대학교미래전략연구소 센터, 『디지털 안보의 세계정치-미중 패권경쟁 사이의 한국』 (파주: 한울아카데미, 2021), 82-83.

은 1953년 이후부터 신자본주의 사회에 이르기까지 첨단기술을 가진 엘리트들로서 군사적 무기 사업과 군비 확충 정책과 무기 소비까지 담당하며 이들을 모두 결합시켜왔고 경제적 자본과 정치적 권력을 유착시켜왔다.¹⁹⁾ 밀스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군산업체 기술과 자본의 축적이 군산업체들의 정치적 관계로 연결되고 이를 통해 그 세력이 보다 강해지고 글로벌한 범위로 확대되었음을 밝혔다.²⁰⁾ 이렇게 보면 한국 경제는 지난 반세기 넘게 미국 경제와 연동되어 있었던 점을 다시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IMF 금융위기 사태를 통해 한국의 경제구조가 전면적으로 개편되면서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이후 전체 방향성과 현상이 이를 뒤따르게 되었다는 점을 유의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사회문화 구조는 한국의 경제 구조가 변화한 그 시점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적 지표와 달리 쉽게 포착되지 않는 역사적 현상에서 주의하여 볼 것은, 과거 주요한 시기에 한국사회에서 정치-경제-사회를 이끄는 주체는 누구였으며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 이후 한국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 역사적 현실에서 초기 한국 사회를 이끈 파워엘리트는 누구였으며 이러한 정치-경제적 행적은 현재 어떤 사태로 드러났으며, 그 방향성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묻게 한다. 이러한 질문을 간추려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한국 사회의 파워엘리트는 누구인가에 대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19) Cumings, Bruce, *The Korean War: a history*, 김준형 역,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 (서울: 현실문화, 2019), 129, 164, 286-287.

20) Mills, Wright C., (*The power elite*, 366-403. 그들은 교육받은 엘리트 집단이 특권계층화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짚어준다. 이들은 최첨단 기술을 가진 엘리트들과 자본을 가진 엘리트들이면서 동시에 경제-정치-군사적 분야에서 이를 소비할 ‘능력’이 있는 사회 안의 최상층이었는데 점차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경제적 자본과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 더욱 견고해졌다고 언급된다.

한국 현대사에서 정치적-경제적 행보는 어떠했으며, 그 결과 지금의 사회로 악화시킨 계기와 그 행보는 어떠했는가, 그 행보를 통해 한국사회는 얼마나 더 악화되었으며 그 방향성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물을 수 있겠다. 이에 대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여러 분야에서 같이 들여다보고 상호비판이 가능하도록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면상 메리토크라시와 관련하여 사회적 공공성 또는 사회 공평성의 측면에서 정치 부문에 한하여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때 현대 정치사에서 한국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IMF 금융위기 사태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정치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문화적 변화를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겠다. 다만 여기서 한 사회의 전반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특정한 경제적 사건을 기점으로 구분한 이유는 한국사회의 형성 역사에 있어서 전후 복구에 소요한 시간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인간성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크게 준 사건이 'IMF 사태'가 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가 금융 위기에 휩싸였던 시기, 한국 사회는 어떻게 IMF를 맞게 되었으며, 그 사태를 직면하게 된 정치사회적 원인과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이때 정치와 권력의 중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겠다. 한국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여 3년간 전쟁을 계속하고 1953년 휴전 협정에 의해 정상적인 형태를 다시 갖추게 된다. 그러나 근현대사에서 모두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45년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을 맞이했으나 한반도는 미군정 시기로 돌입하게 된다. 이때, 미국은 일본군에게 이양 받은 사회통제 권력을 다시 경찰과 군대에게 배분하였으며, 당시 친미정권으로 자유당 독재를 실시한 이승만 정권은 결국 그 무능으로 군사독재에 전권을 내주게 된다. 이렇게 미군정에서 군사독재정부로 이행된 한국 사

회의 정치권력은 정치엘리트로 성장하고 나아가 재벌우선 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자본가 계급을 보호하게 된다.²¹⁾ 이미 일제가 사용했던 이분화 정책 즉 지주와 노동자에 대한 극적인 차별정책으로부터 급부상한 재벌 기업들은 군사정권과 결탁하여 경제 엘리트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군부 엘리트들은 군권 자체에 의존했던 것에서 자본가 계급과의 적극적인 결속관계를 통해 그 지위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다.²²⁾ 1990년 초반까지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었다. 그러면서 군권체제의 국가는 국가 주도형 경제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사실상 자본주의 구도에서 볼 때 내구성이 취약하고 불투명한 상황을 오래 지속시켰던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었다.²³⁾ 또한 경제적 불안정성은 사회적 불안감을 자극하고 키워왔는데, 이러한 사회를 통제하는 방법은 전후 이념 갈등을 극화시켜서 이를 구조적 갈등으로 형성하고 이를 다시 극단적인 이분법과 양자택일의 정지로 체화시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선과 악의 편을 나누고, 여기에 ‘선=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자본가=반공’으로 구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악=사회민주주의=공산주의=노동자=좌파’를 적으로 간주했던 것이다.²⁴⁾ 역사적인 맥락을 가진 계층 구분의 갈등이 풀리지 않은 채로, 군사

21)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기원과 원인-』 (서울: 나남출판사, 1997), 439-444, 475.

22) 김영모, 『한국 자본가 계급 연구: 대기업자본가의 형성과 이동』 (서울: 고현, 2012), 111-121. 한국자본가 계급은 정권과의 우호적 관계, 정책 지원에 따른 자본 축적의 순환에서, 특히 군사정권에서 경제개발계획 등의 재건사업을 독점하면서 급속히 성장하였다.

23) 김용철, 지충남, 유경하, 『현대 한국정치 이해』 (파주: 마인드맵, 2018), 283-289, 297-300, 323.

24) 현장이카데미, 『한국전쟁 70년과 ‘이후’ 교회』 (서울: 모시는사람들, 2021), 172-177. 한국의 정치와 사회구조, 문화 구조는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의 상황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았다. 또한 해방 이후 국가 수립의 주축 세력은 일제강점기부터 토지와 소유권의 이해관계를 가진 경제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다. 정치-경제-종교적 결탁한 세력이 자본가 중심의 구조로 국가를 형성해갔다.

정권의 권력과 자본가만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의 결탁은 결국 경제적으로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이 닥치자 그 경제적 여파로 인해 사회 전반의 구조 자체는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IMF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이후에 한국사회의 정치와 경제는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고 어떤 일을 하였는지 연결하여 보기로 하자. 이때, 정치중심부의 권력엘리트들은 더 이상 군부세력이 아니었다. 이 시기는 문민정부로의 이행이 진척되어 민주주의 이념에 보다 적합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도출해내고 시행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IMF 사태는 너무나 급작스럽게 닥쳤고, 이전의 경제 구조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정부 정책은 매우 혼란스럽고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공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각 개인은 스스로 그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후에 이러한 정부의 행적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겪은 경험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한국 사회가 받은 타격은 그 영향이 경제 구조의 변화에서 시작되어 사회 계층의 이분화를 거쳐 양극화 되면서 문화 현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정치와 사회, 문화적 변형과 정체성 형성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무엇보다 가장 중시되는 정치 부문에 주목하여 본다면, IMF 사태 이후 각 정부마다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흐름을 읽은 후 이에 대응하고 대처하는 ‘신자유주의적 행정’은 명칭적 유사함을 보이고 있었으나, 그 방식과 태도에서 매우 상이했다는 점이다. 일단 사회가 직면한 현상은, 사회 계층의 양극화를 통한 ‘중산층의 몰락’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집약되었다.²⁵⁾ 구조 조정에 따른 실업 증가는 물론, 고용 불안의 상태는 소득 격차

심화 및 상대적 박탈감의 증가와 같은 현상으로 이어졌으며, 소위 ‘화이트 칼라’라고 불리는 사무직 종사자는 대거 ‘블루칼라’의 노동직 종사자가 되었다.²⁶⁾

이때 국가의 행정부와 정치경제의 엘리트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려 했을까? 당시 국가 전체적 구조 변화에 직면하여 어떤 집단에게는 더욱 위기로 다가왔으며, 어떤 집단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로 다가왔는지 물을 수 있겠다. 이 시기를 지난 후에 사회적 부는 극적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보였는데, 그것은 매우 급작스럽게 변화된 사회 변동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도의 변화 역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가 아닌 정부 지도자와 자본가, 또는 재벌과 경제 엘리트들에 의해 부지불식간에 진행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이해하고 문화적 소속감이나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던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은 소득이 불균형해지고 내수가 침체되어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빈곤율이 증가되는 상태에 이르러 그 결과로서 사태를 인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피할 수 없는 세계 경제의 흐름이며 체제 전환에 대한 압력이었지만, 이를 국가의 경제 정책으로 표방한 정부는 내수시장을 확대하려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경제 정책과 노동시장을 기업과 자본가 입장에서 개편하여 노동자에게 임금체계나 근로조건을 강요하고 노조를 무력화를 시도하였다.²⁷⁾ 결국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실패로 판명되었으나 문제는 그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치권력을 획득한 경제엘리트

25) Cahill, Damien & Koings, Martijn, *Neoliberalism*, 최영미 역, 『신자유주의』 (서울: 명인문화사, 2019), 62-69, 137-159.

26) 전병유, 신진욱, 『다중격차』 (페이퍼로드, 2016), 39-51; 유팔무, 김원동, 박경숙,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서울: 삼화, 2005), 11-21, 130-138; 박상현, 『신자유주의와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변화』 (서울: 백산서당, 2012), 305-309, 310-330.

27) 김용철 외, 『현대정치학의 이해』, 392-395.

집단이 사적인 이익과 소수 재벌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가 노출되었던 까닭에 국가의 대다수 구성원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공공 역할과 책임을 발견하기보다 오히려 극소수 자본가의 이익과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서 여론조차 개의치 않는 사회 극상층의 정치적 행보와 특혜 점유와 책임 회피 행위들을 목격했던 것이다. 이러한 국가 정치에 대한 불신은 정치 전반에 걸친 무관심을 유도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함께 산다'는 국가의 가치적 역할과 공동체성에 대한 신뢰를 와해시켰다는 점이다. 이후 정권들이 퇴각하자 본격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다시 확산되면서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직접 측량해 볼 수 있는 시도들이 늘어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것은 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급속도로 증가한 매체들의 다양성과 목소리였다. 과거와는 상이할 정도로 통신기와 방송매체, 소통의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직접 자신들이 체험한 사회적 사건과 각 측면들을 표현하게 된 것이다. 사실 그 이전부터 언론의 역할은 사회 현상에 대한 실태와 방향성에 대해 주시하며 지성인으로서 사회적 감찰 기능을 맡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불평등을 생산하는 체제에 대한 수정은 두고서라도 언론이 감지할 수 있는 불공정 사태를 야기하는 정치-경제의 결탁 행위와 구조화 조짐들, 중산층의 와해 현장에서도 시민적 시각으로 비판하거나 보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상황들과 정황들이 정보로 쏟아져도 그것을 자신들의 도구로 사용하여왔던 언론과 사법 기관은 그 오작동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사회 현상들이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를 통해 사회에 전면적으로 노출되고 빠른 전달이 가능해졌다. 이와 동시에 사회 전반에 걸쳐 특권층과 그 특혜 점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대적 격차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들이 요구되었다. 이런 상황은 또 다른 국면의 사회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는 특권층 입장에

서는 그 격차를 사회적으로 정당화할 기제가 필요해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전체적으로 구성원들의 정보 인식 능력과 그 정보를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이전까지 전체 한국사회를 통치 대상으로 여겼던 정치엘리트나 경제엘리트, 언론엘리트를 넘어설만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사회 자본과 특혜를 점유할 타당성에 대한 담론이 새롭게 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능력주의’라는 오래된 담론이 신자유주의 체제에 맞추어 다시 ‘메리토크라시’라는 담론으로 재형성되었던 것이다.²⁸⁾

4. 신자유주의 메리토크라시와 한국 여성

이 장에서는 ‘여성’이라는 한국사회의 모집단을 선택하여 그 본보기를 놓고 한국 사회 안에 자리하고 있는 메리토크라시의 특성을 분석한다. 앞에서 보았던 주제들 즉 불평등 문제와 불공정 문제를 볼 때, 그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측할 틀을 활용하여 메리토크라시라는 능력주의 담론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를 시대적 성찰로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여성’은 통계적 모집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회집단인 동시에 여러 계층의 여성들이 포함된 전체 집합으로 전제한다. 한국 사회를 ‘여성’이라는 모집단을 통해 살펴볼 때, 정치-경제-사회사적 현안들에서 메리토크라시가 옹호하는 불평등의 문제, 불공정의 문제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그것에 더하여, 능력 위계주의 사회 안에서 ‘여성’ 안에 어떻게 성차별적 요소가 이중적 억압으로 작용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과 ‘능력주의(Meritocracy)’가 정치적으로 언급될 때 능력 위계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관계성이 드러난다.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서

28) 박상현, 『신자유주의와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변화』 (서울: 백산서당, 2012), 305-309, 310-330.

능력 위계주의의 담론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것이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여성은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의 수혜자인가 아니면 피해자인가? 이 질문은 지난 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논쟁 중 하나였다. 여기서 정치적 유권자로서 확보할 대상으로 그려진 20-30대 남성들은 실질적인 여성 정책의 반대자로 변신되었고, 취업 경쟁과 그 생존에서 남은 먹이를 두고 싸워야 하는 전투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당시 논쟁 가운데 있던 발화 사건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자유주의의 최대 수혜자는 여성이다.”

“능력주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대상은 여성이다.”

이와 같은 발화 내용은 한국사회에서 취업을 준비하며 고용불안으로 시달리는 남성 유권자들을 자극했고, 발화 목적대로 ‘여가부 폐지’ 안전과 관련하여 ‘여성’과 ‘능력주의’ 등의 주제로 확대되면서 논쟁 가운데 두 그룹을 형성했다.²⁹⁾ 그 두 그룹은 대책점에 설 필요가 없었지만 위의 발화

29) 참고 기사: 이춘재, 2021.10.13일자, “공정을 가장한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고착시킨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 2022.08.14. 접속; 손효숙, 2021.04.23. 일자, “文 정부가 민생 망친 게 장관 성별 탓? 이준석의 ‘무리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2315310004821>, 2022. 08.14. 접속; 장나래, 2022.03.26. 일자, “이준석, 여성·장애인 혐오 비판에 ‘수수자 정치의 프레임 전쟁’ 반박”,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6365.html?_ga=2.88911069.778553559.1660465292-1118087568.1660465292, 2922.08.14. 접속; 박다해, 2021.06.05. 일자, “이준석이 말하지 않은 것”,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447.html?_ga=2.88911709.778553559.1660465292-1118087568.1660465292, 2022.08.14. 접속; 류옥하다, 2021.12.21. 일자, “이대남은 왜 이준석에 열광하게 되었는가”,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96343#cb, 2022. 08.14 접속; 장슬기, “윤석열·이준석, 샌델이 지적한 ‘능력의 폭정’과 무관한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82>, 2022.08.14. 접속; 사회변혁노동자당, “제1야당 대표가 된 혐오와 능력

구조 속에 갇혀 반목했고 그것은 ‘혐오’라는 정치적 표현 등의 사회 갈등과 분열을 가져왔다. 그런데 위의 발화 내용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다는 점이다. 우선, 그 내용에서 ‘여성’이란 한국 사회 안에서 전체 여성을 말하는지 아니면 일부 여성을 말하는지 그 범위 구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일단 지칭된 대상의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청자는 ‘20-30대’, ‘취업준비자’로 자신을 동일시하기보다, 더 큰 범주인 ‘남성’에 동일시하며 그 상황적 프레임에 갇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언술된 상황과 맥락과 발화자의 의도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대치 국면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화 사건과 내용에서 그 명제의 진위성 혹은 진릿값이 산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언술 주체와 언술 맥락과 그 목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위의 발화 내용은 일정 내용의 사회상을 전제해놓고 시작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여성’과 ‘신자유주의’를 전면에 놓고 그 용어들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신자유주의’의 정체를 논하기에 앞서 그것이 가져온 ‘특혜와 피해’라고 하는 일정한 사회적 결과들에 대해 그 담화 내용을 듣는 청자의 반응을 미리 예측하고 언술을 시작한다는 점이다. ‘여성’이라는 대상을 ‘수혜’와 ‘피해’ 가운데 선택하여 연결하도록 판단하는 방식이면서, 이미 청자가 듣고자 하는 내용을 들려준다. 그 청자가 가상의 ‘남성’이라고 한다면, ‘남성이 원하는 바는 이것이다’ 또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진취적인 선택이 아니라, ‘지금의 절망적 상황은 우리 자신이 아닌 외부로부터 왔는데, 그것을 더 곤란하게 하는 경쟁자는 여성이다’라고 그 분노의 대상을 치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여성은 신자유주의의 수혜를 받은 대상인가의 문제를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수혜’와 ‘피해’를 짚지었던 그 맥락에서 언급된 ‘여성’이 어떤 여성 집합을 일컫는지 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 언급된 ‘수혜자 여성’이란 어떤 여성을 말하는가, 또한 어떤 시기, 어떤 연령대의 여성인가, 어떤 상황에 놓인 여성인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언어로 표현된 ‘여성’이라는 대상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해야 하는 문제가 주어져있다. 또한, 이때 만약 위의 언표 맥락이 정치적이고 논쟁적인 상황 하에 남성 유권자를 확보하겠다는 일회성 정치적 목적으로 발설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발언의 상황적 무게를 떠나 그 내용이 사실인지 혹은 발화된 대상간의 관계 규정이 올바른지 규명되어야 할 필요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언급된 ‘여성’이란 사회적 주체로서 한국 사회의 현상을 함축하는 ‘여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여성은 개인이 아닌 집합인 동시에 집단 안의 구성원으로서 구조 안에서 공동체성을 형성하려는 일원이라는 사실이 모두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간과될 수 없는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복합적 집합’으로서 한국 사회의 계층 분화 실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미 ‘여성’ 집단 안에 한국 경제체제의 수혜자와 피해자가 모두 공존하고 있음을 뜻한다. 여성이라는 집단 안에 여러 계층이 존재하며, 그 계층 안에는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함을 뜻한다. 그러나 위의 ‘여성’ 언급은 그중에서도 사회로 진입하는 20-30대 취업을 준비하는 대상에 한하여 여성-메리트크라시 문제를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일부 전문직이나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여성의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남성의 합격률보다 높았다는 수치를 가정해보자. 이에 대한 여러 국면의 시각차가 생성될 수 있는데, 이것을 놓고 위의 발화 목적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고, 그 후에 사회 내 ‘여성’에 대한 정책적 보완책이나 사회적 배려를 제거하는 논리의 근거와 예시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여성’이 능력주의의 가장 큰 수혜

자라는 주장은 현재 한국 사회 내에서 ‘여성’에서 보는 사회적 진출이 과거보다 더 활발해졌다는 면에서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능력이 그 이상으로 사회적 부를 점유할 수 있는데 왜 정부의 시책이나 ‘여가부’같은 부서가 따로 필요한가라는 초점에 맞추어 그 근거 진술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부분적 사실’일 수 있는 것을 ‘전체적 사실로 보는 오류’에 빠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차별적 요소와 상관없는 국가시험과 취업시험이 서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듯이, 모든 20-30대 취업준비생이 모두 그러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모든 여성이 신자유주의-능력주의적 특혜에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모든 남성이 그 특혜에서 소외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연령별로 20-30대 층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각기 다른 직업군과 다른 계층과 다른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들을 같은 직업 선호군도 아닌 다른 집단을 비교하면서 이를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했다는 점은 발화 조건이나 논리에 맞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위의 발화 목적과 맥락이 현재 한국 사회의 불평등 지수와 불공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취업난에 처한 경제활동 인구를 유권자로 간주할 때 그 문제의식에 동감을 표하거나 그 체감에 공감하는 선에서라는 단서가 붙을 때만 한시적으로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화 내용의 진위성은 한국 사회 안에서 그 구성원을 단기적 유권자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점을 드러낸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지한 사회 공동체성을 위한 논의로 이끌어 내거나 정책에 대한 모색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면에서 여전히 정치적 의도로 활용된 용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그 발화 내용의 무해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발화 효과의 불의성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20-30대 연령층이 한국 사회 내에서

겪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 불공평성의 문제를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하려는 의지나 방향성이 있는가의 문제가 다시 점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교대상이 아닌 집단들을 대치 국면에 놓았던 것이 사회 계층에 따른 다양한 인구 구조를 파악하지 못해서라고 할지라도, 발화 결과와 효과는 사실상 양극화 현상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계층의 양극화 현상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완화시키려는 사회 통합과는 전혀 반대로 사회 분열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유도했다는 점이다. ‘정치’ 또는 한 사회의 ‘정체’의 특성상 사회 전체를 위한 정의 개념이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무한 경쟁 체제를 보편적 사실로 수용하며, 그러한 사태를 완화하거나 조정하지 못하는 정치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한 대상으로 집약하여 ‘여성’에게 돌렸다는 점이다. 발화된 내용에 따르면 ‘여성’은 신자유주의적 체제 안에서 능력자가 아닌 특혜자로서 그 문제적인 ‘승자독식’과 ‘적자생존의 밀림법칙’을 피해가고 있다는 논지로 이해되도록 노출시켰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여성’은 누구인가를 묻는 우리는, 위의 발화 내용에서와 같이 ‘여성’은 신자유주의체제의 수혜자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를 묻는 대신에, 그 ‘여성’이란 어떠한 상황의 여성일 수 있으며 어떠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앞에 놓고 있는 사회 구성원인가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발화 내용은 ‘여성’을 ‘수혜’와 ‘피해’ 중에 택일하라고 했으나, 사실상 ‘여성’ 안에는 신자유주의 체제로 인한 극소수의 수혜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피해자가 한국 사회의 현상 그대로를 노출해주고 있으며 그 ‘모집단’이나 표본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주체로서 노동과 여성을 논의한다고 했을 때, 그 현안으로서 고학력 전문직의 유리천장,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화 문제,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외국인주민과 장애인의 차별 문제도 같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중

에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여성 노동의 문제는 비정규직화 현상이다.³⁰⁾ 이 같은 사실은 IMF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문제로서, ‘모든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 사회의 모든 노동하는 구성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노동 구조를 포함한 경제 구조 전체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 현황은 다음과 같은 지표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국 사회 내의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여성 근로빈곤계층과 노동시장 정책>, <대졸여성 청년층 노동시장>, <미취업 여성청년층의 취업준비활동>, <OECD회원국내 여성취업률>, <2019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OECD 회원국내 20대 여성자살률> 등등이 여성의 사회적 현실성을 표시해주고 있다.³¹⁾ 여기서 볼 때, 20대 대졸여성 청년층의 취업률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했고 그중에 숙련된 업무 능력을 통해 전문직으로 사회 진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같은 세계적인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 통계가 ‘신자유주의적’ 상황에서 돌출되는 한국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가능하게 한 요인들로서 말해질 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와는 달리 국가고시나 전문직 시험을 제외한 고용분야에서 볼 때, 이러한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여성의 전반적인 사회진출 가능성은 취약

30)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노동시장 현황과 고용불안정에서 찾아 정리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강이수, 신경아, 박기남, 『여성과 일』 (동녘, 2015), 237-273; 정현백, 『연대하는 페미니즘』 (동녘, 2021), 148-149; 강이수, “해방 후 한국경제의 변화와 여성의 노동경험”, 『여성과 역사』 4(2006), 49, 재인용.

31) IMF 직후부터 차례대로, 여성 사회적 지위와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김종숙, 강민정, 정형욱, 『여성 비정규직 노동의 특성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5). 김종숙, 이선행, 윤병욱, 『여성 근로빈곤계층과 노동시장정책』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그 이외에, 민현주, 임희정, 『여성일자리 이동실태와 노동시장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김태홍, 유희정, 강민적, 전용일,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 정책의 효과분석과 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민무숙, 오은진, 이시균,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지원서비스 발전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박성정, 최윤정, 전혜숙,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참여 경력단절여성의 훈련성과 제고방향』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를 통해 한국사회 내 여성 노동시장의 환경을 볼 수 있다.

인구 중 20-30대 초반의 문제로서만 볼 수 없으며, 연령별로 비교할 때도 전체 여성은 여전히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으며, 재취업 희망 시 40대 후반-50대 초반의 취업인구가 사무직에서 나왔을 때 육체노동이나 서비스직 외에는 선택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아울러 보여준다.³²⁾ 결국 이러한 사회적 지표들이 보여주는 바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주체로서 활동하기 원하는 '여성'이 공무원이나 사무직 또는 전문직처럼 시험결과로부터 취업결과가 명확한 대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IMF 구조조정 이후 한국전체 인구 자료에서 보듯이, 여성 집단에서도 중산층은 분명하게 이분된 형태로 상-중산층과 하-중산층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³³⁾ 더욱이 이 부분은 '여성'에서 심화된 이분 형태를 보여준다. 외환위기 사태 이후 중산층의 각 부문에서 하층노동자로 계급적 지위가 하강이동한 측면이 '여성'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³⁴⁾ 이 시기 괄목할 만한 것은 극소수의 정치·경제 엘리트들이 실시한 정부주도의 기업친화적 (business friendly) 정책들에 의해 비정규직 노동자나 다국적 가사노동자의 문제 등 한국의 고용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사회정의의 위기 상태를 야기했다는 점이다.³⁵⁾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32) Edgell, Stephen, *Class*, 신형철 역, 『계급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110. 신베버주의자들은 '중간계층의 몰락'의 원인을 중간층 사무직 노동자들의 비숙련 노동으로 들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여성'이라는 모집단을 놓고 볼 때 더욱 극대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므로 과거에는 남성 사무직 집단과 달리 여성 사무직 집단의 노동을 '미숙련 노동'이라고 가치 절하하고, '여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화이트칼라 영역의 최하층 계급이다'(기든스, 1979)라고 결론지었다.

33) 김영옥, 민현주, 김복순, 『여성노동시장의 양극화 추이와 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6).

34)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각 부문에서 여성노동시장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주목할 것은 양극화 현상이다.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감소에 따른 상·하 임금 일자리와 고용이 양극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여성 특히 중위 일자리 취업 여성들의 빈곤화가 예측가능한 형태로 여성노동시장의 계층화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영옥, 민현주, 김복순, 『여성노동시장의 양극화 추이와 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3-7, 30-35, 50-53, 89-92.

더 심각해서, 이에 따라 노동양극화 현상과 사회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대기업 중심의 시장독점을 구조화하고 과도한 단기시점의 성공만을 추구하여 노동시장은 불안해지고, 노동자, 서민, 여성들은 더욱 주변화되고 소외되었다는 점이다.³⁶⁾

여기서 ‘여성’은 한국사회 내의 대학교육을 받고 고위직을 목표로 하는 여성에 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성’에는 다양한 계급/계층에서 사회진입을 시도하는 ‘여성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의 담화에서 ‘전문직’ 사례의 일부 ‘여성’만 놓고 전체 여성에 대한 국가적 시책의 불합리성을 논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는 결론도 도출된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성계에서는 줄곧 ‘빈곤의 여성화’를 논의해왔지만 2022년 현재 OECD 국가로서 ‘여성’의 문제와 ‘빈곤’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다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³⁷⁾ 이것은 비단 한국사회 내의 문제만이 아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최하층 또는 극빈층으로 분류되는 여성들의 비율이 높고 여성들이 생계와 가족부양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빈곤층은 더욱 곤란한 사태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한다.³⁸⁾ 이러한 빈곤 상황은 ‘빈곤의 세습화’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성’ 안에서

35) 신광영,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서울: 후마니타스, 2016), 101, 133-140, 152, 173, 200-202.

36) 외환 위기와 그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 있다. 세계적 ‘글로벌 경제’라는 ‘메가트렌드’적 영향외에도 한국 경제개혁의 역할을 지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경제개혁의 기본방향인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이때 위기를 가중시켰던 재벌구조 개혁을 과제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친대기업정책’을 지지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상생정책 및 하도급거래개선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임혜란,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경제개혁”, 『한국정치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8), 347-373.

37) Parrenas, Rhacel Salazar,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a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문현아 역,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 이주, 가사노동』 (서울: 여이연, 2009), 394-395.

38) Stiglitz, Joseph, *(The) price of inequal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 이순희 역, 『불평등의 대가: 분열될 사회는 왜 위험한가』 (과주: 열린책들, 2013), 13-16.

‘중간계층 또는 중간계급’을 놓고 보았을 때 극적으로 이분화 되거나 양극화 상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³⁹⁾ 이제껏 정치적 담론이나 언론에서 ‘여성’을 지칭하면서 ‘모두 같은 전체 여성’으로 묶어서 논의하는 것의 문제는, 일정 목적에 따른 정치적 언술방법이라는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어떤 한 계층이나 세대로 구분된 ‘여성’을 특정하여 말하는데 ‘전체 여성’으로 들리도록 하는 효과를 동반해왔다. 이러한 경우에 지적된 대상을 제외한 실질적인 ‘여성’ 문제는 모두 경시되어 왔다. 이렇게 되면 각기 다른 여성의 상황들이 간과되어 각각의 문제 범위 안으로 복속되므로 결국 ‘여성’의 문제로 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여성’의 전체 문제와 각 상황의 문제들이 구분되어 다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각계각층마다 사회적 삶의 조건과 사회-경제-정치적 이해관계들과 정체성이 각각 다르게 존재하므로, 발화 사태에서 또는 언술 국면에서 ‘여성’으로 통칭하여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여성’ 전체의 문제가 사회 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둘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위의 메리트크라시 담론과 신자유주의체제의 동일한 주장에서 ‘여성’은 모두 ‘신자유주의와 능력 위계주의 사회의 수혜자’로 등장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실제로 ‘여성’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체제와 능력 위계주의’로 인한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 현상을 가진 한국 사회의 실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더욱 양극화되어 가고

39) 한 편에서 볼 때, 이러한 조사 연구는 여성과 ‘능력주의’의 담론을 분석할 때 ‘계급’ 또는 ‘계층’을 구분하는 작업은 한국사회 내의 ‘여성’의 다면적 상황을 설명하는 데 보다 정확한 시각적 재현에 도움을 준다. ‘계급’에 의한 현상보기를 할 때, 그 목적을 ‘분리가 아닌 ‘관계적 구분’에 놓고 이에 따른 평등한 사회, 공정한 사회, 통합된 사회로의 대안적 시각 또는 그 가능성의 단서를 찾으면서 접근할 것이다. 참고, 이현재, “신자유주의 시대 젠더 정의와 ‘유리천장 깨뜨리기’”, 『능력주의와 페미니즘』 (고양: 사월의 책, 2018), 232.

있다는 점이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이 글은 ‘능력주의’에서 능력이란 무엇이며, 한국사회 안에 나타난 ‘능력주의’ 또는 능력 위계주의는 어떤 배경에서 생성되었고 어떤 계기를 통해 심화되어 지금과 같은 한국사회의 현상으로 나타났는지 살펴 보았다. 능력 존중의 사회와 능력 위계중심의 사회는 다르다는 구분 하에 능력 위계주의가 옹호하는 신자유주의 논리와 그것이 가져온 사회 분리현상을 놓고 ‘여성’ 안에 그 분리현상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는지를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현대 우리 사회에서 ‘능력주의’를 주장하는 언표 현상을 놓고, ‘능력주의(Meritocracy)’가 추구하는 능력 위계중심의 사회와 사회적 분열의 상관성을 비판하였다. 이때 ‘여성’ 집단 안에서는 그 양극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회적 지표들이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 사회와 그 사회 구성원의 관계성으로 들어가 볼 때, 사회적 주체로서 ‘여성’은 어떤 사회 전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특수한 양태로 존재하는지 재조명해보았다.

그 결과, ‘능력주의(Meritocracy)’를 표방하는 입장의 논리가 무엇인지 보면서 그 발화내용의 기표와 기의를 구분하여, 자본주의 내의 ‘능력’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권과 관련된 보상의 문제로서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성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보았다. 이를 통해 ‘능력’이 존중되는 사회와 ‘능력 위계적 사회’는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민주사회의 각 주체들이 역사 전체를 통해 주시해야 할 것은 사회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방향성 문제와도 연관됨을 고찰해보았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이념은 신학적인 것으로부터 사회문화적 환경에 이르기까지, 또한 인간의 생존 조건에서부터 사고와 문화에 이르기까지 연

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간-사회 의 공동체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메타인 지적 시각이 요구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기독교 성서 속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민주적 이 념으로 역사화 되었는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현실 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로 그 문제들이 노출될 때 신학은 어떻게 구체적으 로 접근할 것인지, 또한 어떻게 그 접경지역에서 다음 세대나 이후의 사 회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결정하고 그 판단에 대한 논의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해 보다 다양한 측면의 시각과 심도 있는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능력주의’ 현상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화된 사례들과 다양한 서술도 요구된다. 신자유주의의 가속화가 진 행되면서 생겨난 사회 문제들과 계급의 양극화 상황에 대해서도 그 속성 에 대한 파악과 대안적 사고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선 연구에서 보았듯이 사회집단이 가지는 체계와 방향성은 그 구성 원에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정체성과 인간의 사회적 실현 성을 마련한다. 따라서 정치경제면에서 민주주의 이념과 경제 체제의 사 고가 상충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해 그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측 면에 대하여 신학이 논리적으로 밝혀주어야 할 역할이나 책무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그 책임 완수가 신학적 ‘능력’의 의미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이수. “해방 후 한국경제의 변화와 여성의 노동경험.” 『여성과 역사』 4(2006), 43-76.
- _____. 『여성과 일: 한국여성 노동의 이해』. 파주: 동녘, 2001.
- 강원택.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파주: 21세기북스, 2014.
- _____.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서울: 푸른길, 2018.
- 김상배. 『비대면 시대의 미증 기술경쟁: 정보세계정치학의 시각』. 서울: 사회평론 아카데미, 2021.
- _____. 『디지털 안보의 세계정치-미중 패권경쟁 사이의 한국-』. 서울대학교미래 전연구센터. 파주: 한울아카데미, 2021.
- 김수행.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김신일.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1997.
- 김영모. 『한국 자본가 계급 연구: 대기업자본가의 형성과 이동』. 서울: 고현, 2012.
- 김영옥. 『여성노동시장의 양극화 추이와 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6
- 김용철. 『현대 한국정치의 이해』. 파주: 마인드맵, 2018.
- 김종숙. 『여성 근로빈곤계층과 노동시장정책』.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 김태홍.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 정책의 효과분석과 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 김무숙.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서비스 발전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 민현주. 『여성일자리 이동실태와 노동시장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기원과 원인-』. 서울: 나남출판사, 1997 (2003).
- 박상현. 『신자유주의와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변화』. 서울: 백산서당, 2012.
- 박성정.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참여 경력단절여성의 훈련성과 제고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 박종현. 『플라톤: 메논, 파이돈, 국가』. 서울: 서울대출판부, 1987.

- 신광영.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서울: 후마니타스, 2016.
- 신선미. 『미취업 여성청년층의 취업준비활동 효과와 취업지원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 _____. 『고졸 여성청년층의 진로·취업 및 경력개발 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 신중섭. 『포퓰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서울: 자유기업센터, 1999.
- 유팔무.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서울: 삼화, 2005.
- 이인정.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나남, 2020.
- 이주희. 『우리천장 깨뜨리기-관리직 여성의 일과 삶』.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 이현재. 『능력주의와 페미니즘』. 고양: 사월의 책, 2018.
- 임혜란.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경제개혁.” 『한국정치연구』 27(2018), 347-373.
- 전병유. 『다중격차』. 서울: 페이퍼로드, 2016.
- 정현백. 『연대하는 페미니즘』. 파주: 동녘, 2021.
- 주성수. 『한국 시민사회와 지식인』. 서울: 아르케, 2002.
- 현장아카데미. 『한국전쟁 70년과 ‘이후’ 교회』. 서울: 모시는사람들, 2021.
- Apple, Michael W. *Official Knowledge: democratic education in a conservative age*, 박부권 역. 『학교지식의 정치학』. 서울: 우리교육, 2001.
- Bauman, Zygmunt. *Does the richness of the few benefit us all?*. 안규남 역.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파주: 동녘, 2013.
- Bourdieu, Pierre and Passeron, Jean-Claude. *La reproduction: éléments pour une théorie du système d'enseignement*, 이상호 역. 『재생산』. 서울: 동문선, 2003.
- Bowles, Samuel and Gintis, Herbert.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이규환 역. 『자본주의와 학교교육』. 서울: 사계절, 1986.
- Cahill, Damien & Koings, Martijn. *Neoliberalism*. 최영미 역. 『신자유주의』. 서울: 명인문화사, 2019.
- Cumings, Bruce. *The Korean War*. N.Y.: The Modern Library, 2010.
- Cumings, Bruce. *The Korean War: a history*. 조행복 역.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 서울: 현실문화, 2017.
- Davis, K. and Moore, W. *Class, Status and Power*. N.Y.: Free, 1966.

- Edgell, Stephen. *Class*. 신행철 역. 『계급 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 Giddens, Anthony. *Capitalism and modern social theory: an analogy of the writings of Marx, Durkheim and Max Weber*. 박노영, 임영일 역. 『자본주의와 현대사회이론: 마르크스, 뒤르켐 그리고 막스 베버의 저작분석』. 파주: 한길사, 2008.
- Hansen, Phillip. *Hannah Arendt: politics, history and citizenship*. 김인순 역. 『한나 아렌트의 정치이론과 정치철학』. 서울: 삼우사, 2008.
- Hughes, Conrad. *Education and Elitism: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N.Y.: Routledge, 2021.
- Markovits, Daniel. *Meritocracy Trap*. N.Y.: Penguin Press, 2020.
- McNamee, Stephen J. and Meller, Robert K. *The meritocracy myth*. 김현정 역. 『능력주의는 허구다』. 서울: 사이, 2015.
- Mills, C. Wright. *(The) power elite*. 정명진 역. 『파워 엘리트』. 서울: 부글북스, 2013.
- Misztal, A Barbra. *Intellectual and the Public Good: Creativity and Civil Cour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Parrenas, Rhacel Salazar.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a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문현아 역.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 이주, 가사노동』. 서울: 여이연, 2009.
- Putnam, D Robert. *Our kids: the American dream in crisis*. 정태식 역. 『우리 아이들: 빈부격차는 어떻게 미래 세대를 파괴하는가?』. 서울: 페이퍼로드, 2016.
- Reeves, Richard. *Dream hoarders: how the American upper middle class is leaving everyone else in the dust, why that is a problem, and what to do about it*. 김승진 역. 『20 vs. 80의 사회』. 서울: 민음사, 2019.
- Seidman, Steven. *Contested knowledge: social theory in the postmodern era. 2nd ed.* 박창호 역. 『지식 논쟁-포스트모던 시대의 사회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1999.
- Said, Edward.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 전신욱, 서봉섭 역. 『권력과 지성인』. 서울: 창, 1996.
- Sandel, J. Michael.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 함규진 역.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

하는가』. 서울: 와이즈베리, 2020.

Stiglitz, Joseph. *(The) price of inequal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 이순희 역. 『불평등의 대가: 분열될 사회는 왜 위험한가』. 파주: 열린책들, 2013.

Young, Michael. *The rise of the meritocracy*. 유강은 역. 『능력주의: 2034년,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엘리트 계급의 세습 이야기』. 서울: 이매진, 2020.

이준재. 한겨레신문, 2021.10.13일자, “공정을 가장한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고착시킨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 (최종검색일 2022.08.14.)

손호숙. 한국일보, 2021.04.23.일자, “文 정부가 민생 망친 게 장관 성별 탓? 이준석의 ‘무리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2315310004821>. (최종검색일 2022.08.14.)

장나래. 한겨레신문, 2022.03.26.일자, “이준석, 여성·장애인 혐오 비판에 ‘수수자 정치의 프레임 전쟁’ 반박”,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6365.html?_ga=2.88911069.778553559.1660465292-1118087568.1660465292. (최종검색일 2022.08.14.)

박다혜. 한겨레21, 2021.06.04.일자, “이준석이 말하지 않은 것”,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447.html?_ga=2.88911709.778553559.1660465292-1118087568.1660465292. (최종검색일 2022.08.14.)

류옥하다. 오마이뉴스, 2021.12.21.일자, “이대남은 왜 이준석에 열광하게 되었는가”,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96343#cb. (최종검색일 2022.08.14.)

장슬기. 미디어오늘, 2022.04.02. 일자, “윤석열·이준석, 샌델이 지적한 ‘능력의 폭정과 무관한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82>. (최종검색일 2022.08.14.)

사회변혁노동자당. “제1야당 대표가 된 혐오와 능력주의”, <http://rp.jinbo.net/change/82316>. (최종검색일 2022.08.14.)

논문투고일: 2022년 06월 30일

심사개시일: 2022년 07월 17일

게재확정일: 2022년 08월 15일

• 국 문 초 록 •

능력주의(Meritocracy)'는 개인의 능력이 존중되는 사회를 표방해왔다. 그렇지만 실제로 '능력주의'는 특권의 차이를 계급으로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어왔다. 그것이 초래하는 자본주의의 양극화 현상을 우려하는 사회학자들은, '능력주의'를 주장하는 특정 계급이 사회 전체 부와 특권을 점유하고 있으며 사회 불평등과 갈등 및 분열을 촉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논문은 메리토크라시의 발화자와 그 특성을 현대의 귀족주의적 세습과 민주주의적 대의명분과 엘리트주의와의 결합에서 보고, 그것이 특권층의 정당화 기제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그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능력주의'라는 용어는 누구에 의해 쓰여지고 있으며 어떤 맥락에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그 언표의 주체와 의도가 무엇인지 드러낸다. 이때 본격적 분석 작업으로 사회 모집단으로서 한국사회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여기서 나타난 현상을 '능력 위계주의'라 일컬으며 본래의 능력주의와는 구분된다는 사실을 밝힌다. 또한 능력 위계주의와 신자유주의체제가 한국 중산층여성을 어떻게 분리시켜왔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지형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윤리적-신학적 시각의 해석과 개입이 어떤 지점에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시야 확보와 조망할 자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메리토크라시, 능력 위계주의, 신자유주의, 사회 불평등, 여성
